

북한의 외화수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김 중 호*

- I. 서론
- II.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수요
- III. 북한의 외화획득 조치
- IV. 미국의 전략적 대응
- V. 결 론

요약

이 글은 북한에 존재하는 외화 수요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외화 획득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한 외화 수요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 외화 수요의 유발 요인들을 분석하고 외화 획득 조치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외화 수요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그 다음의 과제는 북한 외화 획득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권력구도 재편과정 속에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외화획득 노력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및 핵확산 금지를 위해 대북 압력 수단으로서 여러 제재 수단들을 강구해 왔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대북한 압박 조치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기는 하나, 북한 변화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궁극적 타겟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전략적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I 서론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부터 북한이 얻은 교훈들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외화 획득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겠다.¹⁾ 북한 정부의 외화 수요가 증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1991년 공산권 경제블록이 해체되면서 북한이 냉전시절동안 당연하게 받아온 ‘형제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전체제 붕괴가 북한에게 던져주었던 충격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이 구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대외거래를 위해 경화(硬貨, hard currency)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능했던 외부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냉전붕괴 이후에는 외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외화수요 증가는 ‘역사의 종말’ 이후 단일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구조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여진다.²⁾

그러나 북한의 외화수요가 갖는 함의가 단순히 경제차원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학계와 정책결정 분야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외화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의 경제 정책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외화 수요는 경제운용에 필요한 생산재 및 소비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제현실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 최고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 수요는 정권의 통치 능력을 향상하는 전략적 방안 모색의 일환인 것이다. 즉, 외화가 국가운영 자금 또는 통치 자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 개인 우상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폐쇄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외화 수요가 정치적 현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 최고 지도부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사상, 군사, 경제 분야의 역량을 극대화 한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온 북한의 외화 유치 활동은 바로 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 계획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외화 수요를 충족

1) 이 글의 핵심 단어인 외화(外貨, foreign currency)는 경화(硬貨, hard currency), 외환(外換, foreign exchange) 등의 용어들과 동일한 뜻을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

2)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를 ‘역사의 종말’에 빗대어 설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을 참조.

하기 위해 취하는 북한의 행위들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계획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외화 획득 행위들이 북한의 반시장 경제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반민주적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며 자본주의적 국제경제 체제의 안정성과 평화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2000년대 경제회생의 과정 속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남 도발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게 되었다. 대북한 제재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외화 획득이 북한 도발 행위의 동력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외화 수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북한의 외화 획득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 최우선순위로 설정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핵확산 의지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수립, 실행되고 있다. 미국이 취하는 경제적 대응은 대북 경제체제 지속이며,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관계 강화이고, 외교적 대응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및 다자회담과 더불어 대북한압박을 증대하기 위한 대중국 설득 외교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북한에 존재하는 외화 수요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외화 획득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작업은 북한 외화 수요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 외화 수요의 유발 요인들을 분석하고 외화 획득 조치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외화 수요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그 다음의 작업은 북한 외화 획득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권력구도가 변화하는 ‘전환기’ 속에서 수정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하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북한 변화 유도 조치들을 평가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접근법과 향후 북미관계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의 외화 수요에 관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외화 수요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 운용의 비합리성과 은폐성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외화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북한의 외화 획득 규모에 대한 총체적 평가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외화 획득 과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규모 이외에도 여러 기관들과 개인

들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하는 비공식적 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이슈들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외화 수요에 관한 논의 역시 가설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의 개발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 획득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Ⅱ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수요

1. 북한의 경제난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욱 비효율적으로 굳어져간 북한의 경제 체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자연재해와 결합되어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 위기 상황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경제 관리체제는 거의 불능화되었고 주민들의 생존 몸부림에 의해 형성된 시장이 공급과 배급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국가가 시장이라는 임시방편적 도구를 활용하여 국가경제관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된 남북관계가 하나의 외적 동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북한은 관리체제의 불능이라는 내적 요인을 감안하여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3년 시장 개설 조치 등을 통해 변형된 계획경제 운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부문과 비국가부문의 공생 관계가 허용되었으나 점차 국가의 공식 경제 부문이 시장이라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의해 침식되어 국가가 시장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적 공생관계로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약화 현상은 결코 국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단서가 아니라 국가 기구의 변형된 사회착취 현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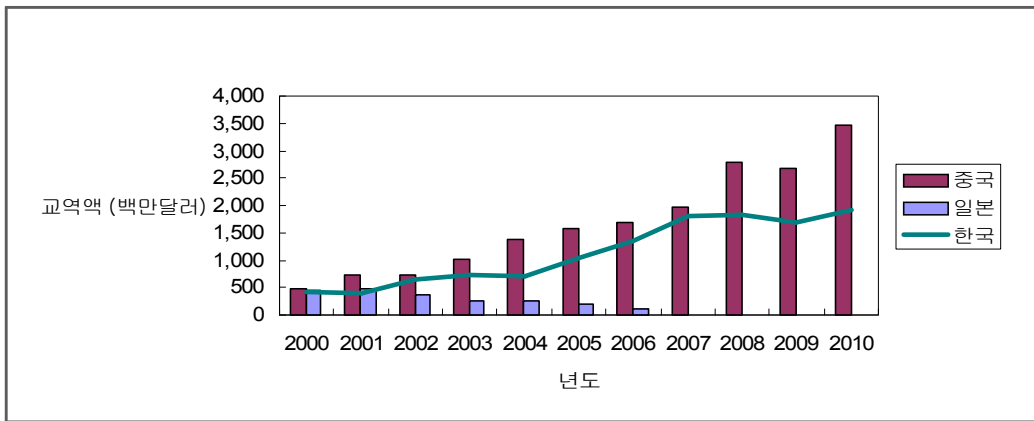
<표 1> 북한의 대 한·중·일 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488	737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2,787	2,681	3,466
한국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일본	464	475	370	265	253	194	122	9	8	3	0

자료: KOTRA 북한 대외무역동향 각 연호

<그림 1> 북한의 대 한중일 교역 추이



북한의 대외관계 역시 기생적 공생관계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경제 지원이 사라졌을 때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이 북한의 생명선이 되었으며, 2000년대 일본의 경제지원이 감소할 때 한국의 지원증가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08년 이후 한국의 대북 지원이 주춤해졌을 때 중국이 북한 생존의 후원자로 등장하였다. 이는 북한의 교역 추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일 교역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대중국 교역과 대한국 교역은 계속 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에 대한 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화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제2차 핵실험(2009년)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으로의 모든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외화 공급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운 좋게도 북한의 외화 부족량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원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었다.

2010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34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가 북한 경제의 한 특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난 해법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처방 없이 증상치료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된 화폐개혁이 그 증거이다. 이것의 목적은 당·군 간부들이나 돈주들이 개인 보유하고 있는 ‘장롱화폐’를 밖으로 끄집어내 화폐유통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의 계획경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³⁾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화폐개혁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임에 틀림없다. 특히 식량가격은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표 2>에서 보듯이, 화폐개혁 이전과 비교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90~100배 오른 상황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환율 역시 100배 상승한 상황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물가가 오르고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외화 뿐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학습시킨 사건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올해에도 전년도 생산량 부족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2010년도 생산량이 전년 보다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⁴⁾ 올해 초부터 북한은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들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거나 식량 수입을 도모해 왔다. 지난 2월 FAO/WFP의 식량실태조사 목적의 북한 방문(2.21~3.14) 이후로 EU,

<표 2> 화폐개혁 이후 북한 쌀값 및 환율 변동 추이

시장쌀값 (원/kg)	20원(2009년12월) → 600원(2010년1월) → 300원(2월) → 5~600원(3월) → 4~500원(4~6월) → 900원(7월) → 1,000원(8~11월) → 2,000원(2011년1월) → 2,000원(3월) → 2,400원(10월)
시장환율 (원/달러)	30원(2009년12월) → 530원(2010년1월) → 380원(2월) → 2,200원(3월) → 600~700원(4월) → 700~800원(5~6월) → 1,000원(7월) → 1,500원(8~11월) → 2,000원(12월) → 3,000원(2011년1~3월) → 3,100원 (10월)

자료: Daily NK

3) 「노동신문」 및 「조선신보」, 2010. 12.5.~12.20. 참조.

4) FAO/WFP는 2011년 북한의 식량 수요량 535만톤, 2010년 생산량 448만톤을 고려하면 2011년도 식량 부족분이 87만톤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 북한 식량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의 식량구매 시도가 과거 북한의 대금 미지급 사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북한의 외화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북한의 외화 수요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경제지원이 허락되지 않는 한, 외화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생산재 및 소비재를 수입할 수 없는 북한의 주요 경제원칙은 ‘자력갱생’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명시하면서 외화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즉,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외화수요는 대외거래에 필요한 경화결제 능력을 향상하려는 정책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당히 폐쇄되고 고립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외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협의회인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북한의 외화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다. 냉전시기 사회주의 블록 내에서는 주로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원을 통해 필요한 물자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굳이 외화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블록의 와해로 말미암아 북한은 외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외화라는 매개체를 확보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경제체제 속에서는 외환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외화획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화획득을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들도 동원해왔다. 이것이 바로 국제경제질서를 방해하고 특히 미국과 같은 경제선진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된 것이다.

<표 3>

북한의 국가부채 추이

단위: 억 달러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부채	78.6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121.0	122.9	124.6

주) 2001년 이후로는 북한의 외채규모 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블룸버그통신 (2008.1.11)은 북한의 부채규모를 150억 달러로 추산함.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외화수요는 경화결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제적 욕구이다. 북한의 대외 국가부채는 <표 3>에서 보듯이 12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그 중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은 110억달러 정도이다.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구소련의 대북한 국가채권을 러시아가 계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부채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지원을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⁶⁾

북한 외화 수요의 경제적 초점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생산재 및 소비재를 구입하여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이겠지만, 그것의 군사적 초점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군사 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의 정치적 목적은 이른바 통치자금 조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외화를 획득하는지 살펴보자.

5) 당국간 합의에 따라 남한이 북한에 빌려준 차관 규모는 현재 9억3천만 달러이며 2012년 6월부터 상환 일정이 시작된다. 차관의 내용은 식량차관 (7억2천만 달러),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자재장비 차관 (1억 3천만 달러),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 (8천만 달러) 등이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우리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 준 1조 3,74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8,722억원도 포함하여 3조5천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되면서 KEDO에 대출해준 국채는 부실채권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용수, “북이 남에 빚진 돈 3조5000억원,” 『조선일보』, 2011.4.20 참조.

6) 북한의 국제신용도는 1980년대 중반 모라토리엄 국가에 포함된 이후 최하이다. 서방 금융기관들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대북한 채무를 1994년부터 채권으로 만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해왔는데, 이 채권은 2009년 1월 현재 액면가의 1/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009.1.31. 참조.

Ⅲ 북한의 외화 획득 조치

북한의 외화 획득 방식은 크게 합법적 방식과 비합법적 방식으로 나뉜다. 합법적 방식은 공식적인 무역 및 투자 유치 활동과 외부로부터의 송금 등을 포함하며, 비합법적 방식은 무기판매, 지폐위조, 마약판매, 인신매매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한다.⁷⁾ 외화 획득 행위의 주체는 노동당과 군대를 포함한 국가 정부 기관, 국영기업체, 개인 등이며 이들의 활동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모두 넘나들고 있다.

1. 합법적 외화 획득

가. 무역

외화 획득을 위한 북한의 주요 행위는 무역과 투자유치이며 그 주요 대상은 바로 중국이다. 북·중간 무역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성 무역, 민간 무역회사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반무역, 그리고 국경지역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변경무역 등이 있다.⁸⁾

북중간 공식 무역은 중국의 세관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대체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2010년 북한 대외무역의 50%를 넘어섰다. 남북간 교역량을 제외하면 북중간 무역량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2010년 북중간 무역 규모는 34억6천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1,800만 달러 (전세계 대북한

7) 합법적 방식이라 해도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외화가 반드시 공식 통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공개하는 공식 통계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공개한다 해도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8) 지원성 무역은 원유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 국제가격보다 낮은 우호가격을 적용하고 국영기업이 개입하여 거래하는 원조형태의 무역이며, 일반무역은 양국의 무역회사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역 허가증을 받고 대외교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변경무역은 '변경 소액 무역권'을 허가받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거나 국경주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역이다. 이종운,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8. 10.

FDI 중 27.5%)에서 2008년 4,100만 달러(전세계 대북한 FDI 중 93.7%)로 급증하였다.⁹⁾ <표 4>에서 보듯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광물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광물 수출은 북한의 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와 맞물려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중간 변경무역은 단동 등 국경주변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중국 중소기업들에 의해 주도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중간 교역에서 국경지역의 중국 업체

<표 4>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대중국 수출액 (X)	대중국 수입액 (M)	무역수지 (X-M)
2000	37.2	450.8	- 413.6
2001	166.8	570.7	- 403.9
2002	270.9	467.3	- 196.4
2003	395.5	628.0	- 232.5
2004	582.2	794.5	- 212.3
2005	496.5	1,084.7	- 588.2
2006	467.7	1,231.9	- 764.2
2007	581.5	1,392.5	- 811.0
2008	754.0	2,033.2	- 1,279.2
2009	500.6	1,209.6	- 709.0
2010	1,187.9	2,277.8	- 1,089.9

자료: 한국무역협회

9) 다음을 참조. Drew Thomp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ruary 2011).

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나 이들이 선호하는 비합리적, 비제도적, 음성적 거래관행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혜택과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실제와 다른 품목과 가격이 세관에 신고되기도 하고, 반출입되는 물품의 대금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실제 거래되는 품목, 수량, 가격 조건 등이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변경무역 종사자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1차 산품 위주의 거래 또는 임가공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품을 개발한다던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¹⁰⁾ 중국 중앙정부는 낙후된 변방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변용하여 변경무역 업체들은 타지역 업체들의 무역 대행을 의뢰받아 생계를 이어가기도 한다.¹¹⁾ 이에 덧붙여, 북중간 무역은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 교역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한국, 일본, 유럽 등 제3국과의 거래를 위한 대행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제3국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과 임가공 사업을 하거나, 중국 기업이 제3국의 수입업체와 북한 사이에서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하기도 하며, 중국업체가 북한에서 수입한 광산물이나 농수산물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문제는 북중간 무역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현금거래, 현물거래, 봇짐무역, 심지어는 밀무역 등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북중 무역 규모는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공산권 경제블록이 해체된 이후 1990년대 기간동안 북한의 대외지급 신용도가 급감하고 경화결제에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현금구매와 현물거래 방식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양국의 지정된 은행들에는 송금을 위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¹²⁾ 그러나 실제 북중무역에 있어서

10) 북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중국의 변경무역 제도를 활용하여 무연탄, 철광석, 어패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자본투자 능력이 없고 해외판로 개척에 취약한 북한 기업들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나 관련 설비를 제공받는 위탁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의류봉제 부문의 위탁가공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 중국은 '변경소액무역권'을 허가받은 국경지역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변경지역에서 개인이나 기업 관계자에 의한 1인당 3,000위안 상당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종종 자금력이 크지 않은 변경무역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석탄, 철광석, 곡물, 자동차 등과 같은 품목을 거래하는 것으로 세관통계에 잡히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기업이나 다른 지역 업체들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12) 북한과 중국은 2005년 4월 북한 광선은행 단둥지점에 중국위안화, 유로화, 일본엔화, 홍콩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 건설은행 단둥지점에 동일한 형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중국업체들이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북한으로 송금할 경우 북한의 고려은행, 화려은행,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중 한 곳에 기업 계좌를 열고 외환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을 통한 대금결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³⁾ 중국 업체의 요구로 인해 북한은 대금 송금 방식을 주로 이용하지만, 북한측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수출대금에 관해서는 외화 현금으로 인출하여 북한 무역회사나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현지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운영자금이나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대외무역에 있어서 현금결제와 현물거래 방식을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북중간 변경무역의 오랜 관행 외에도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마카오 BDA 금융제재를 경험한 이후 국제 금융제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중 무역 관계자들이 은행거래를 회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고 신용장 개설이나 세금 문제 등을 회피하려는 관행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이중용도 물품이나 세관신고에서 누락된 물품들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치품과 기계·전자기기 부품 등 반입금지 물품들은 봇짐 무역의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기도 한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는 상당수의 물자와 현금이 반출입되는 관행을 특징으로 하는 북중무역은 북한의 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 정부가 향후 금융제도와 교역관행을 개혁한다는 명분아래 북중간 비공식적, 불법적 대금결제 관행에 제재를 가한다면 양국간 거래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해외진출 외화벌이 사업

북한의 외화 획득 방식으로는 무역 이외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외화벌이 사업과 해외진출 외화벌이 사업이 있다. 국내 외화벌이는 대체로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다. 관광지 개발을 통해 관광수입을 확보하고, 호텔, 식당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북한은 외화벌이 일꾼들을 해외로 파견해왔다. 북한의 해외진출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의 목적은 노동당의 통치자금 확보였으나 1990년대 경제난이 가중되자 실질적인 자구책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해졌다. 진출규모가 작으며 단순 노동을 위한 인력 수출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건설업, 봉제업, 요식업, 무역,

13)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단둥지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대가의 21%만 북한 광선은행 단둥지점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되었다고 한다. 이종운 (2009), p. 6.

운수업 등의 분야로 진출한다.

북한의 해외진출 방식은 대체로 합작, 합영, 독자 형태를 띤다. 그 중 북한 자금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합작형태의 진출방식을 선호한다. 합영형태의 사업에는 단순 인력공급이 그친다. 독자 투자의 경우는 대체로 해외에 식당을 개업하는 정도이다. 일부 개인이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화교나 일본 조총련계의 자본으로 건립된 기업이 주도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해외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공식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인력 파견의 경우 급여 수준, 해외 북한 업체의 사업 규모 등을 종합하면 북한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규모는 6~7만명 정도로 매년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의 외화가 이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외화벌이를 통해 얻은 수입의 용도는 첫째, 당 운영경비 마련, 둘째, 국가 운영자금 확보, 셋째, 국가 무역경비 확보, 넷째, 군수물자 생산 및 수출입 자금 마련 등이다.¹⁵⁾ 외화벌이 종사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정해진 사업 실적, 즉, 할당된 상납액이 정해져 있는데, 자금부족과 사업실패 등으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환되어 처벌받게 되므로 외화벌이가 강조되던 1990년대부터 이들의 탈북 시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다. 투자 유치 및 기타 활동

2010년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면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는 미미했으나, 2011년초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주요

14)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파견된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80%가 강제 수탈되어 노동당 39호실의 관리 자금을 편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해외파견 인력은 러시아에 2~3만명, 중동에 1만5천명, 동남아시아에 1만5천명, 아프리카에 8천명, 동유럽 지역에 5천명, 몽골에 5천명, 중국에 3천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 주성하, “북, 근로자 6만~7만명 해외파견,” 「동아일보」, 2011.5.11;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인력 규모는 북중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계속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단둥지역은 1천여명, 훈춘과 도문 지역은 1,600여명, 흑룡강성 목단강시는 2천여명 등의 북한 인력 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박종국, “남북교역 중단후 북인력 중에 대거 유입,” 「연합뉴스」, 2011.5.11; 조명철은 2009년 기준으로 북한이 2~3만명의 노동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여 벌어들이는 년소득 규모를 대체로 4~6천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했다. 조명철,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09년 봄호, pp. 8~9.

15) 조명철, pp. 2~3.

사업의 실행자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되었다.¹⁶⁾ 북중간 경험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직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6월 황금평과 라선에 대한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막 출범한 상태이므로 그 진행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8년 8월 한국 관광객의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기까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매년 3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북한이 년 4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안정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외화 획득 방안 중의 하나는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이다. 탈북자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액이 년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⁸⁾ 최근에는 북한이 수력발전소들을 국제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하여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외화수입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¹⁹⁾ 이와 같이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다양한 합법적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2. 비합법적 외화 획득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불법활동 금지 입장에 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지된 불법활동들을 통해 외화 획득을 모색해오고 있다.²⁰⁾ 북한의 당국자, 하부기관원, 일반 주민 등 여러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활동들은 무기판매,

16) 대풍그룹의 이사장은 김양건 대남비서 겸 아태평화위원장이고 총재는 박철수 재중동포 사업가이며, 국가개발은행의 이사장은 전일춘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겸 39호실장이고, 부이사장은 박철수이다.

17) 사건개발 방지에 관한 남북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 4월8일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 북한은 5월31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특구법의 제정으로 2002년에 제정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18) 탈북자들은 200만~3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보내며, 주로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브로커와 접촉을 하고, 결국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과 접촉을 하여 외화를 전달하게 된다. 「조선일보」, 2011.2.7.

19) 북한은 이미 CDM에 9건을 등록하였다. 1톤당 미화 16달러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8MW 수력발전소 하나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외화수입은 3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 수력발전소 청정등록 탄소배출권 판매추진,” 2011.3.12.

20) 북한은 2006년 10월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3월 ‘국제마약협약’에 가입하였다.

위조지폐유통, 마약판매, 인신매매, 사치품 및 생필품 밀수 등이다. 발각되는 북한의 불법활동들은 북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정보계통의 부분적인 설명과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북한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그리고 군부와 내각 등이 여러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²¹⁾ 앞에서 설명한 합법적인 외화획득 방식에서처럼 비합법적 외화획득 과정에서도 각 기관이나 단위별로 이른바 할당량에 대한 부담이 경쟁과 불법을 자행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화벌이 사업권 유지를 위해서 각 무역회사나 기업소 관계자들이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상납금 마련을 위해서도 불법활동에 손을 대기도 한다.²²⁾ 불법활동의 사례는 다양하고 규모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활동에 대한 정보들은 언제나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채택)와 1874호(2009년 채택)는 북한의 무기 수출과 UN회원국들의 대북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동지역 등에 대한 무기 판매로 상당한 외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표 5>에서 보듯이, 북한의 무기판매 수입은 2002년의 경우 최대 최대 2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북한의 무기수출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5	106.6	229.5	185.0	60.5	124.6	64.2	49.6	49.4

자료: SIPRI

21)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 20개중 38호실과 39호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 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9호실은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공장 및 기업소를 운영하면서 달러위조,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외화벌이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북한에서 국제금융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는 중앙당 39호실 재정경제부와, 39호실이 만든 조선대성은 행이다. 39호실이 만든 회사 대성중국의 산하기관인 조광무역이 당 자금을 관리하며 BDA 계좌들도 관리했다. 북한은 2009년 38호실과 39호실을 통합했다가 최근 다시 분리했다고 한다. 이귀원, “북, 김정일 금고 38호실 부활,” 연합뉴스, 2011.2.14.

22) 함경북도에서 기업소 사장을 지낸 한 탈북자는 사업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해 당·군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납금을 제공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노동당 39호실의 주도하에 모르핀, 헤로인, 필로폰 등 마약 밀매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연 4000~5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²³⁾ 2003년 4월 호주에서 헤로인 125kg을 밀반입하려던 봉수호가 나포된 이후 북한의 마약밀매는 감소했고 2005~2006년 기간동안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은 연 1,75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²⁴⁾ 북한은 미국 화폐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슈퍼노트'를 유통하여 외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위조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북한의 소득은 위조지폐 액면가의 약40% 정도이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슈퍼노트 생산을 통해 북한은 연평균 약 200만 달러의 불법 외화수입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⁵⁾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은 2007년 이후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조된 담배나 의약품 등의 밀매를 통해서도 외화수입을 확보하였다.²⁶⁾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방식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화 획득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이나 북한 외화 획득의 전체적인 규모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북한이 불법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경제 유지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는 것이다.²⁷⁾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북한의 외화 획득 활동은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3)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07-7*,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24) 앞의 글, p. 8.

25) David Asher,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5-92A*, 2006; 로이스 미국 의원은 1989~2006년 기간에 발견된 북한 위조 달러는 5천만 달러에 이르며 북한의 불법소득은 1,500만에서 2,500만 달러가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Edward R. Royce, "Gangster Regime: How North Korea Counterfeits United States Currency,"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arch 12, 2007, from <http://www.royce.house.gov/uploadedfiles/report.3.12.07.FINAL.GansterRegime.pdf>.

26) 다음을 참조. C.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U.S. Department of States,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1: Drug and Chemical Control, Country Reports: North Korea*, (Washington, DC: 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2009); Raphael F. Perl,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Washington, D.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2007).

27) 장형수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그는 2000-2008년의 기간동안 북한의 누적된 상품수지 적자가 90억 달러가 넘는데, 북한이 불법활동을 통한 외화수입 없이도 거의 매년 공식적인 외화수지에서 실제로는 흑자를 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축적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추정,"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10).

IV 미국의 전략적 대응

1. 동북아시아 권력구도 변화와 미국의 전략 이익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내보낸다. 한반도 질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질서 형성의 핵심 축이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작은 반도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기동안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을 동북아시아 대륙으로 한정하기 위해 태평양 서안지역에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다. 1991년 유럽의 냉전체제는 붕괴됐지만 여전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 구조에 벗어나지 못했다. 소련의 해체 이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 했으나, 1979년 이후 개혁개방의 씨를 뿌린 중국이 2001년 세계무대에 등장하여 그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국제 시스템은 중국 변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익 계산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되었다. 이는 곧 미국의 북한문제 접근법에 있어서도 중국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축이 크게 이동한 기점이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2009.5.25)을 단행한 이후 중국내 전통파와 전략파간에 ‘북한 다루기’를 놓고 대격돌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전통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²⁸⁾ 전통파의 입장은 중국의 오랜 우방인 북한이 체제붕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와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듯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우호협력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왔다. 지난해 5월과 8월, 그리고 올해 5월 등 1년 안에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북한과 중국은 매우 긴밀한 협조 양태를

28)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 2009.

보여왔다.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 빈번히 교류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소식이 흘러나왔다.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의 화려한 몸짓들이 연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과연 미국은 어떤 전략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북한 외화수요의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이 외화획득을 통해 경제를 회생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바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안정화 및 권력 공고화를 성취하려는 정치군사적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는 외화 획득을 위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화라는 금융수단을 통치술의 효과 증진 도구로 활용하려는 북한에 압력을 주기 위해 미국은 대외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제재를 활용하고 있다.²⁹⁾

북중 경제관계의 강화 추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시각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이후로 북중 경제협력의 가속화가 북한의 대중국 종속 심화 또는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연구자들과 전략가들은 그런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한 보고서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이유는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 및 한반도 관리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시각이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³⁰⁾ 북한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협력 및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정치·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며, 만약 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29)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 대상인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 위험한 테러 단체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과 이란 등으로부터 핵관련 기술과 부품을 지원받고, 핵무기 및 미사일에 관련된 기술을 시리아와 이란 등에 제공하는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행위가 된다. 다음의 글 참조. 이대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한국," 「세종정책연구」 5권 2호, 세종연구소, 2009. 안보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에 관해 다음의 글 참조. David Asher, Victor Comras, Patrick Cronin, *Pressure: Coercive Economic Statecraft and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1);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Enga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craft*, (Honolulu: East West Center, 2011).

30) 북한에 진출한 138개 중국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이윤을 발생하기 어려운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이다. 대북투자의 장애물로서 부당이득추구 관행, 인프라 결여, 억압적인 정치환경 등이 언급되고 있다. Drew Thomp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ruary 2011).

중국기업들이 중국 지방정부를 움직여 결국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³¹⁾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개발 계획의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³²⁾ 중국의 대북한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SOC 분야의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로 진행되는 것인데, 중국의 대북한 투자 합의 건수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광물자원 개발투자 및 채굴권 확보 사업들이 중국에 의해 북한 전역에서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구체화되는 분위기이다.³³⁾ 중국은 2009년 북한과 나진항 부두의 보수 확장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부두 건설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위화도 및 황금평 개발에 각각 3억 달러와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이미 착공했으며, 2009년 이후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³⁴⁾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지원 및 투자 행보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이중적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전의 강패국가에서 성실한 개발도상국이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후자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질서의 변화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하는 북한의 변화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굳이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막아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세력확장이 미국에게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31) Erica S. Downs, "New Interest Groups in Chinese Foreign Policy,"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in a hearing titled "China's Foreign Policy: Challenges and Player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11).

32) 그동안 고도성장에 매진해온 중국 지도부는 최근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내수시장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0년 10월 15-18일 동안 제17기 5중전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향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포용적 성장 개념 도입은 중국의 수출감소 및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최명해, "중국 12.5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10.26).

33) 북중간 주요 투자협력 실태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북한경제리뷰」, KDI, 2010년 8월호.

34) 북중간 무역 및 투자의 실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배중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EU와 중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가을호.

동맹관계를 강화할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되고 있다.³⁵⁾

북한의 변화를 어느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추진할 것인가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관심사항일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시각은 북한이 하루 빨리 핵문제 해결을 통해 국제경제지원을 받고 국제 금융질서에 적극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접근법을 적용시켜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의 맛을 보게 하여 북한의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당장 서방금융체제 편입을 위해 기존의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를 수정할 필요없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 북한이 최근 수년동안 경공업 중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경제 우선 입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수출산업 육성과 경제정책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 수단으로서 경제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 미국의 대북한 압박 조치

미국의 대북한 압박의 목적은 첫째,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비확산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키고 지역 안보 질서를 안정화하는 것이며, 셋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북한 압박 조치로서 미국은 첫째, 대한민국 군사 동맹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둘째, 대북한 양자 및 다자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대북한 압력조치와 더불어 미국은 대북한 인센티브로서 비핵화 조치 이행시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협상, 대규모 경제지원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한 압박을 위해 다양한 전략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더불어 UN차원의 다자적 제재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은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최대 걸림돌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리트머스나 다름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대북한 제재 조치들이 어느 순간 중국의 전략이익을 제한하는 듯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 조치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35) 지난 10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국 의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는 양국 관계가 경제군사 측면의 다차원동맹관계로 승격되는 기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UN차원의 제재를 살펴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채택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거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들이다. <표 6>에서 보듯이, 1718호보다 강화된 1874호에 담긴 대북제재의 세 가지 분야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북한 행·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이다.³⁶⁾ 첫째,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금지하며, UN회원국들로 하여금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대북한 이전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검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³⁷⁾ 그리고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재원 동결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필요를 해소하는 인도주의 지원, 개발, 비핵화 촉진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말고 기존 계약도 축소해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독자적 대북 제재의 경우, 미국은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³⁸⁾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570호에서 상무부의 특별허가가 없는 한 북한산 부품, 서비스, 기술이 결합된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포하였다.³⁹⁾ 이를 넓게 확대 적용하면 향후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향후 황금평, 라선 경제특구 등에서 생산되는 북한관련 제품들이 미국의 수입통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과 협력하여 만든 모든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허락이 없는 한 미국으로 수출될

36) UN결의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형수, “UN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 봄);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가전략」, 제16권2호, (서울: 세종연구소, 2010).

37)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미국의 오랜 독자적 대북제재를 국제화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이 몇몇 동맹 및 우방국들과 추진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UN 결의안을 통해 국제차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38) 미국의 행정명령은 의회가 법을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입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법을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입법 장치이다.

39) 일부에서는 이번 행정조치가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FTA의 혜택이 북한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미국내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려진 예방조치라고 해석한다. 미국측 시각은 북한산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미국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쉽게 역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음을 참조. Bruce Klingner, "Complaints about North Korean Imports A Smoke Screen For Trade Protectionism," *Excutive Summary Background*,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May 2011); Mark E. Manyin, et al., "Imports from North Korea: Existing Rules, Implications of the KORUS FTA,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RS Report*,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2, 2011).

수 없는 불법제품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 압박 조치들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인 셈이다.⁴⁰⁾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는 바로 2005년에 발생한 마카오 BDA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8월 마카오 당국은 방코델타아시아 (Banko Delta Asia)에 예치된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소유의

<표 6> 미국의 주요 대북제재 조치

부시 행정부 시기 (2001 ~ 2008)		
행정명령 13382 (2005.6.28)	-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체 및 동조자의 재산 동결 - 북한 기관(8개) 제재대상 지정	북한 1차 핵실험 (2006.10.9)
UN안보리 결의안 1718 (2006.10.14)	- 북한행발 의심 화물 검색 협조 - WMD 및 중화기, 사치품 수출금지 - UN에 의해 지정된 개인·단체의 금융자산과 재원 동결	
행정명령 13466 (2008.6.26)	- 예외경우가 아니면, 미국내 북한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이전 및 거래 동결 - 미국인이 선박을 북한에 등록할 수 없으며, 북한 국적기 선박의 소유, 임대, 운행 또는 보험 행위 금지	
오바마 행정부 시기 (2009 ~ 현재)		
UN안보리 결의안 1874 (2009.6.12)	- 금제품목 적재화물에 대한 검색·압류·처분 및 의심선박 연료공급 서비스 금지 -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 수출금지 - WMD·미사일 개발·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재원의 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북한 2차 핵실험 (2009.5.25)
행정명령 13551 (2010.8.30)	- 북한 개인(1명) 및 기관(3개)의 미국내 자산 동결	
행정명령 13570 (2011.4.18)	수입허가 없으면 북한산 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	

40) 미국과 중국은 당면한 국제이슈들에 대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갈등의 잠재성도 갖고 있다. 다음을 참조. Shirley A. Kan,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RS Report,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26, 2011); P. Lee, "China in America's Sanctions Crosshairs," Asia Times, June 24, 2010; S. S.-H. Lo, *The Politics of Cross-Border Crime in Greater China: Case Studies of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Macao*, (Armonk, New York : M.E. Sharpe, 2009); D. Dombey & R. McGregor, "China resists US call for curbs on Pyongyang," *The Financial Times*, July 24, 2009.

자금 2,500만달러가 묶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⁴¹⁾ 당시 상황은 북한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관련국들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9월19일에 발표할 공동성명의 내용을 논의하고 있던 때였다. 미국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에 근거해 BDA측에 북한 관련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자금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른바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반테러법에 규정된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 조항을 근거로 마카오의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미국이 어떤 외국 금융기관을 테러 또는 WMD 확산 등과 관련된 불법 활동 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기관은 미국 금융망에 속한 어떤 은행과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⁴²⁾ 따라서 BDA가 요주의 기관으로 언급되자마자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대북 관련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차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은행들은 대북 금융거래를 유지하였다. 미국이 BDA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러시아측이 북한에 개설해준 신규계좌를 통해 북한은 BDA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⁴³⁾ 간단히 말해, BDA 사건은 국제금융 체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취약성을 확인한 사건이었다.⁴⁴⁾ 그와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금융망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1) 탈북 금융인 최세웅에 따르면, 북한의 9개 은행과 23개 무역회사가 BDA에 예치한 북한 계좌 52개 중 39개는 공식계좌였으나 나머지 13개 계좌는 북한 당국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황일도, "탈북 외환딜러 최세웅이 분석한 BDA 문제의 실체," 「신동아」, 2007년 6월호.

42) 달러화 송금은 국제금융망에서 반드시 미국 은행을 거쳐야만 사용가능한 전신환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은행들이 상대방 은행에 예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코레스 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을 맺어야 한다. A은행이 B은행에 100만달러를 송금한다는 것은, '스위프트 시스템(swift system)'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A은행에 만들어 놓은 B은행 명의의 계좌 잔고에 100만달러를 늘리고 B은행에 만들어놓은 A은행 명의의 계좌 잔고를 100만 달러 줄이는 식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레스 협정은 양자협정이므로 A은행이 C은행에 송금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은행이 코레스 협정을 맺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B은행이 양쪽과 모두 협정을 맺고 있다면 A와 C가 직접 협정을 맺지 않아도 B를 거쳐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간의 거래망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대체로 송금이 가능하다. 황일도 (2007) 참조.

43) 2005년 9월에 발생한 마카오 BDA 제재문제는 2006년 11월 부시 행정부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북 정책의 기류변화를 반영하여 급선회하였다. 2007년 1월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 2월 6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BDA문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당시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미 양측이 6자회담에서 합의하면 한 달 안에 미국이 BDA 문제를 종결하고 또한 그로부터 한 달안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7.2.5. 참조.

44) 다음을 참조. Bruce Klingner, "Banco Delta Asia Ruling Complicates North Korean Nuclear Deal," Working Paper,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15, 2007); D. Lague & D. Greenlees, "Squeeze on Banco Delta Asia hit North Korea where it hu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18, 2007.


V 결 론

군사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북한의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의 아사를 발생시킨 경제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이 다양한 경제 조치들을 도입하고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물자 공급 및 생산의 증대를 도모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난은 ‘진행형’일 뿐이다. 북한의 딜레마는 외화 가득함이 매우 낮은 경제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경제난이 외화 획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재 및 소비재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데에는 많은 외화가 필요하고, 국가의 공식 배급체제가 붕괴된 이후 먹거리를 찾아 장마당으로 내몰린 주민들에게도 외화는 필수 생존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의 화폐 및 외화 통제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단행된 2009년말의 화폐교환 조치는 당·군 간부들이나 신흥 사업가들과 돈주들의 ‘장롱화폐’를 정리하는 데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했으나, 물가 상승과 외화 고갈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수요는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김일성조선의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는 정치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야 하므로 외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통해 지도부의 주요자리에 임명된 이후 조직적으로 추진되는 권력세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강성대국 진입을 실감할 수 있도록 기대 이상의 혜택을 베풀어야 하므로 외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미국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북한은 플루토늄 핵무기 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핵무기까지 생산할 능력을 꾸준히 갖추어 왔고 이는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던 미국과 한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랜 기간동안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고비용의 무기체계를 구축한 것은 특정 외부세력이 북한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간파하지 못한 북한만의 은밀한 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방법이 없다. 특히 지난 10년에

결친 외부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전용론’이든 한미 양국이 동의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시각이다. 미국도 오랜 기간에 걸쳐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를 차단하고 북한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외화획득 채널이 상당히 제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중국은 북한의 탈출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화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접근법이 미중관계의 관리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대북한 압박 조치의 궁극적 타겟은 북한 변화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중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북한 압박 조치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고 미·중간 금융·무역 갈등이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 외화수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더욱 더 복잡해져만 가고 있다. 

<참고문헌>

- 개번 맥코맥 지음, 박성준 옮김,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서울: 이카루스 미디어, 2006.
-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플래닛미디어, 2009.
- 박진환,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국제농업개발원」, 2005.
- 북한경제포럼 편,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오름, 2008.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 2010.
- 장형수, 김석진, 송정호,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9년 12월.
- 황일도, “탈북 외환달러 최세웅이 분석한 ‘BDA 문제’의 실체,” 신동아, 2007년 6월호.
- _____, “탈북 외환달러가 본 북한 화폐개혁의 속뜻,” 신동아, 2010년 3월호.
- Asher, David. and Victor Comras and Patrick Cronin. *Pressure: Coercive Economic Statecraft and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1
- Babson, Bradley O. "Economic Perspectives on Future Directions for Engagement with the DPRK in a Post-test World." *Policy Analysis Brief*. The Stanley Foundation, December 2006.
- Dombey, D., & McGregor, R. "China resists US call for curbs on Pyongyang." *The Financial Times*, July 24, 2009.
- Drezner, Daniel W. "Bad Debts: Assessing China's Financial Influence in Great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Fall 2009.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Enga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craft*. Honolulu: East West Center, 2011.
- Hufbauer, G. C., Schott, J. J., Elliott, K. A., & Oegg, B.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 ed.).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Klingner, B. "Banco Delta Asia Ruling Complicates North Korean Nuclear Deal." *Working Paper*.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15, 2007.
- Lague, D., & Greenlees, D. "Squeeze on Banco Delta Asia hit North Korea where it hu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18, 2007.
- Landler, M. "North Korea Says It Will Halt Talks and Restart Its Nuclear Program." *The New York Times*, April 14, 2009.
- Lee, P. "China in America's Sanctions Crosshairs." *Asia Times*, June 24, 2010.
- Lo, S. S.-H. (2009). *The Politics of Cross-Border Crime in Greater China: Case Studies of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Macao*. Armonk, New York : M.E. Sharpe.
- Nanto, Dick K. "North Korea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June 12, 2009.

- Perl, Raphael and Dick K. Nanto.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ebruary. 16, 2007.
- Perl, Raphael F.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January 25, 2007.
- Rennack, Dianne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ctober 17, 2006.
- Royce, E. R. "Gangster Regime: How North Korea Counterfeits United States Currency." Washington, D.C.: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arch 12, 2007.
- Sheena, C.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32 (1), 2007.
- Snyder, Scott. "China-Korea Relations: Kim Jong-il Pays Tribute to Beijing-In His Own Way." *Comparative Connections*, 8 (1), 2006.
- Spaeth, A. "Kim'S Rackets: To Fund His Lifestyle and His Nukes, Kim Jong Il Helms a Vast Criminal Network." *Time*, June 2, 2003.
- Steil, B., & Litan, R. E. *Financial Statecraft: The Role of Financial Market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U.S. Department of States,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rot, Volume 1: Drug and Chemical Control, Country Reports: North Korea*. Washington, DC: 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cement Affairs, 2009.
- U.S. Senate, "Drugs, Counterfeiting, and Weapons Proliferation: The North Korean Connection." Testimony of Bach William, Hearing before the Financial Management, the Budge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S. hrg. 108-157), 108th Congress, 2003.
- Zarate, J. C. "Harnessing the Financial Furies: Smart Financial Power and National Secur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3, 2009.